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3일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전북도민 성원으로 8조원 시대 함께 열다”

송하진 도지사, 국가예산 확보 관련

“불가능에 가까웠던 전라유학진흥원 확보 달라진 전북 위상 상승 코로나19 극복 계기로”

송하진 도지사는 3일 전북도가 역대 최대인 8조 2,675억 원 규모의 국가예산을 확보한 것을 두고 “도민의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도예산과 국가예산이 동시에 8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며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2014년 도지사 취임 당시 6조 원이었던 국가예산이 7년 만에 8조원을 돌파했다”면서 “전북의 강점을 살린 내발적 발전전략이 국가 예산의 점진적 증가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의미를 짚었다.

에는 국방과 외교예산이 포함돼 있고, 전북이 확보한 국가예산 규모가 일시적 지원금 성격의 재난지원금을 제외한 수치인 점을 고려하면, 정부예산안 증가율을 상회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국가예산 확보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예산을 묻자 송지사는 “투쟁이나 다툼없었다”며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비 확보”를 언급했다. 송지사는 “광주·전남이 주도하는 호남화 진흥원 사업과 견줄 전북만의 독자적인 역사문화권을 정립하는 예산을 확보한 것”이라면서 “전북유학과 전북학의 역사적 유래를 언급하고 육성 필요성을 집요하게 설득한 결과, 예산안 확정 막바지에 극적으로 반영을 이뤄낼 수 있었다”며 감회를 밝혔다. 이어,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 연구국회의원들의 이름을 차례로 언급하며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을 비롯해 국가예산 확보의 고비마다 도와 주신 국회의원님들과 모든 분들께

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도가 확보한 내년 국가예산에 대해 “새천년 생태문명을 선도하는 전북형 뉴딜예산,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미래혁신성장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농업의 미래경쟁력을 높이는 스마트농생명산업 예산, 글로벌 물류 중심지 도약을 위한 새만금 예산,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 확보에 중점을 뒀다”며 “코로나 일상을 극복하고 생태문명 대도약을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재확산과 고병원성 AI 발병으로 감염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국가예산과 도 예산을 활용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해 감염 확산 차단, 민생고 해결, 전북의 미래 준비라는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꼼꼼하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매우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겠다”면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살피며 도민의 삶을 보듬고, 가장 먼저 앞으로 나아가 시대를 조망하고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 예산 8조원 시대 일궈낸 국회 예결위원들

예산 전문가·해결사 면모 유감없이 발휘

민주 윤준병 의원

전북 유일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전북 발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노력의 결실로 전북 국가예산 8조원 시대를 일궈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도 전북 국가예산은 역대 최대인 총 8조2,675억원을 확보해 지난 2019년 전북 국가예산 7조원 시대를 맞이한 후 2년 만에 8조원을 넘어서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예산에서 역대 최대의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 위기 국면 속에서도 윤준병 의원을 필두로 한 정치권과 전북도 및 14개 시·군이 여러 차례에 걸친 협의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단계 전략을 세우고, 70대 중점관리대상사업 선별 등을 통해 초기부터 기획재정부와 국회 상임위원회에 대한 설득작업에 집중했던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윤준병 의원은 전북지역 국회의원 중 유일한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서 바쁘게 돌아다니는 정국 속에서도 서울시 제1행정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던 36년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해결사’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실제로 지난 6월 국회 예결위 위원으로 선임된 이후 윤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내에 전북 국가예산 상황실 역할을 겸비한 ‘국회 전북도민청’을 설치해 선제적인 국가예산 확보 작업에 돌입했다.

이울러 윤준병 의원은 지역구인 정읍·고창 지역을 비롯한 전북의 신규 사업들을 직접 발굴하고, 예산 확보 필요성과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등 꼼꼼하고 철저한 준비로 당초 전북 국가예산에 대한 정부안(7조 5,422억원)보다 국회단계에서 7,253억원을 증액시키는 데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새만금 내부개발과 수질 개선 등 관련 예산 1조3,164억원 확보를 비롯해 ▲한국탄소산업진흥원 310억원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250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453.2억원 ▲익산 왕궁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 138억원 ▲전북대학교

약학대학 시설사업 7.7억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11.9억원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개최 지원 56.7억원 등 전북 현안사업 예산 확보를 통해 전북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한편 윤 의원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전시콘텐츠 구성 28억원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 5억원 ▲정읍 디지털 미디어문화유산아트센터 조성 3.5억원 ▲국립연금공단 연수원 설립 5.6억원 ▲내장산 캠퍼스·카라반 전용 야영장 조성 2억원 ▲고창 해리·무장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5억원 ▲정읍경찰서 직원관사 신축 1억원 ▲정읍 상정지구 농촌유수개발사업 5억원 ▲고창 해리~부안 국도(22호선 건설) 79억원 등 예산반영으로 정읍·고창의 숙원사업 해결에도 앞장섰다.

윤준병 의원은 “제21대 국회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민생과 전북을 위해 단 한 톨의 국가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며 “전북도 및 14개 시·군과 함께 발맞춰 예산 확보 활동을 펼친 끝에 국회 단계에서 7천억원을 증액해 전북 국가예산 8조원 시대를 열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음=김대환 기자

예산 삭감 방침에 당지도부 설득... 예산 지켜내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국가 예산안'이 통과됐다.

전체 예산 규모는 정부안 555.8조원 대비 2.2조원 증가한 558조원이며, 이중 전북은 8조2,675억원을 확보해 역대 최고액을 달성했다.

당초 정부안 7조5,422억원에서 7,253억원이 증액돼 드디어 국가예산 8조원 시대 개막을 알렸다.

특히, 전북의 국가예산 확보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뉴딜예산 삭감에 민생 예산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을 세웠고, 불가피하게 전북 예산도 포함돼 있었다.

정운천 의원은 전북예산이 삭감된다면 최근 국민의힘이 보여준 친호남행보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판단, 지도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끝에 전북 예산을 다시 살릴 수 있었다.

정 의원은 친화력과 집요함은 예산심사 과정 내내 계속됐다.

전북도청 국가예산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전북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나올 때마다 국민의힘 의원 한명 한명을 적극적으로 설득해냈다.



대표적으로 전북의 가장 큰 현안인 새만금 예산 심사에서 ‘새만금공항’, ‘새만금 간척사막관’, ‘새만금 기업성장센터’ 등이 삭감 위기에

처해있었지만, 국민의힘 동료의원들을 설득해 예산을 지켜냈다.

또한 ‘호남동행 핵심기술개발 사업’ 역시 상임위 심사단계에서 삭감 의견이 있었지만, 철회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천 의원의 주도로 만들어진 국민의힘 ‘호남동행 국회의원’도 이번 예산심사에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북 시장·군수들은 해당 동행 국회의원을 찾아가 예산협조를 요청했으며, 국민의힘 전북 동행 국회의원들도 본인의 지역구 예산과 함께 전북의 동행 지역 예산도 함께 챙기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이 이번 전북 예산 확보에도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안 통과 시일이 다가오면서 전북의 핵심 사업이 반영되지 않아 비상

이 걸린 상태에서 정운천 의원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획재정부 안도청 예산실장과 추경호 국회의원 예결위 간사를 끝까지 설득해 ‘전라유학진흥원 건립(2억원)’,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10억원)’, ‘전주 로파크 건립(2.6억원) 사업’을 반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주시는 전주 동행 국회의원인 추경호 간사와 긴밀하게 협의해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7억원)’, ‘전주 로파크 건립(2.6억원)’, ‘드론스포츠복합센터 건립(3억원) 등을 반영시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정 의원의 역점 사업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310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정 의원의 대표발의로 시작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지난 11월 3일 전주의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국가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됐으며, 이번 예산 반영으로 내년 3월 정식 출범에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정운천 의원은 “국민통합과 지역구의 극복이라는 대전제에 맞추어 전북을 도와 전국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절절한 호소에 동료의원들이 적극 동의해준 결과”라고 소회를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의회 예결특위 예산 심사

“복지 사각지대 없도록 만전 기해야”

김만기 위원장, “복지여성보건국 예산, 도 예산 35.6% 차지”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기, 고창2)는 3일 2021년 전라북도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일차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심사실국은 환경녹지국, 복지여성보건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일자리경제본부 순으로 이뤄졌다.

김만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안)은 도민의 복리증진 및 현안에 대해 누수없는 예산투입을 위해 꼼꼼한 심사를 해주시는 동료 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복지여성보건국 예산은 2조5,326억원으로 전북도 예산의 35.6%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민생안정과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현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안)은 지난 8월 호주시 전복도는 그간 꾸준히 추진해온 사방사업으로 피해가 적었다고 언급하며, “내년에 증가된 자연재난 발생시에도 대규모 피해를 막아 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산불진화용 헬기구입과 관련해 진화장비를 보강하는 만큼, 산불발생 시 신속한 초동진화를 통해 도민의 생

명과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대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길문화관 조성사업 등 외벽의 갑작스런 환경변화로 인해 사업이 변경돼 어쩔 수 없지만, 인위적으로 관계사업이 임의대로 변경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3)은 “도내 산림환경 및 일반복지 보존 예산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단기적으로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규제정책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미세먼지를 정화하고 자체 저감할 수 있는 환경보존 정책이 더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은 환경보존 및 교육 등에 유익한 사업으로 적극적인 시·군홍보를 통해 관련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4)은 “올해 구축한 전북도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의 유지보수비와 단속실적에 대해 미세먼지 경보발령시 철저한 단속으로 미세먼지의 포다름 주범인 노후 경유차 등의 운행이 제한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

‘대안 반영’ 국회 본회의 통과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3일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해 대표발의했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상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정의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간이과세제를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올해 초 전국적으로 발병,확산된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과 같은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은 기업 존립과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상황이다.

특히 간이과세 적용의 매출 기준인 4,800만원은 20년간 동결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오랜 시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간이과세 매출기준이 8천만 원으로 상향돼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우리 경제의 든든한 토대가 되었던 소기업,소상공인과 영세 개인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김제·부안 12개 주요 현안 예산 152억원 증액·확보

민주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21대 국회 첫 국가예산 심의 과정에서 김제,부안의 각종 현안 사업들을 속도감있게 해결해 내고 있다. 김제·부안의 오랜 숙원 사업들인 ‘김제 국립청소농생명센터 가족형 리조트화 사업’, ‘동학농민혁명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사업’ 등의 국가예산을 신규 확보했다.

이원택 의원은 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김제·부안의 8개 신규사업을 포함한 12개 주요 현안사업예산을 국회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152억 증액, 확보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12개 사업들은 총사업비가 8,561억원(내년 국가 예산 규모는 214억)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으로, 오랜 기간 국가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김제, 부안의 숙원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김제시가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증액 요청한 5개 사업중 4개 사업의 국가 예산이



증액됐다. ▲김제 국립청소농생명센터 가족형 리조트화 사업 6억원(신규) ▲김제 백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 5억원(신규)

▲친환경 전기굴착기 보조금 지원사업 30억원(계속/총사업비 200억원)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사업 20억원(신규/총사업비 350억원)이 증액됐다.

이외에도 지난 8월 예타를 통과한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으로 10억원(신규 / 총사업비 4,146억원) ▲호남고속도로(삼례IC-김제IC) 확장사업도 3억원(신규 / 총사업비 2,315억)이 확보됐다.

‘김제 민경파출소 신축’은 내년에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재추진할 예정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도 정점이 해소되지 않아 이미 정부안에 반영된 71억원 이외에 추가 증액되지 않았다.

한편, 부안군이 증액 요청한 사업들은 모두 예산이 확보됐다. ▲동학농민혁명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사업(신규/총사업비 271억원)은 2억원 확보 ▲직소천 자동차 야영장 확대 조성사업도 30억원이 추가 증액 ▲부안 격포 파출소 신축(신규/총사업비 6.05억원)을 위해 설계비 300만원이 확보됐다. 전라유학진흥원 설립을 위한 예산 2억원(신규/총사업비 100억원)도 확보했다.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준비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 등의 예산도 국회 단계에서 39.9억을 증액, 기존 정부안에 반영된 18억원을 포함, 총 56.9억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유호상 기자